

 <b>제주발전연구원</b>	<b>보 도 자 료</b> 2009년 8월 5일(수요일)	담당	사회복지문화팀 고승한 연구위원
		연락	726-6145 010-3808-6101

## 중복성 있는 복지서비스 조정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

-제주발전연구원 “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”서 제언

- 제주지역 내 사회복지사업 간 중복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리하여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기관(시설)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- 제주발전연구원은 정책과제 “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” 연구에서 이같이 제언했다.
- 또한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(가칭, 사회복지교부금법) 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’에 법령률화 할 필요가 있음.
-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해 온 분권교부세 제도가 2005년~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폐지하고 다양한 대안(예컨대, 보통교부세로 환원, 포괄보조금제도 도입, 분권교부세 제

도의 유예,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등)들이 모색되고 있음.

- 분권교부세 폐지('09. 12. 31 예정)에 따른 분권교부세 운영 방향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개편 방향은 대체로 분권교부세 제도의 일정기간 존속을 고려하고 있는 편임.
- 분권교부세 제도가 일정기간 존속하면 기존에 나타난 현상처럼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 지원액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감소할 것임. 반면에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감소해 나가면 지방정부는 복지재정 부담액을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임.
-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지원 방식이 포괄배분과 복지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 배정은 제주의 복지재정 안정화와 확충에 기여할 것임.
-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복지수요 증가와 사회복지재정의 안정화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복지이양사업 분석, 정부의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논의, 그리고 사회복지기관(시설)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